

경제주평

■ G7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조건

- 중장기 한국 경제 발전의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

목 차

■ G7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조건

- 중장기 한국 경제 발전의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

Executive Summary	i
1. 개 요	1
2. G7 진입에 대한 한국 경제의 긍정적 요인	6
3. G7 진입에 대한 한국 경제의 부정적 요인	17
4. 시사점	26

□ 비상업 목적으로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할 경우 내용의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으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 제 연 구 실 : 주 원 경제연구실장 (02-2072-6235, juwon@hri.co.kr)

Executive Summary

□ G7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조건

- 중장기 한국 경제 발전의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

■ 개 요

한국의 빠른 경제 성장과 경제 발전 속도로 선진국 그룹이라 할 수 있는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를 넘어 선진국 중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G7(Group of Seven) 강국으로의 도약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G7이란 선진국 중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이탈리아의 7개 경제 대국의 정상 회의와 각료급 회의를 의미하며, 가입국은 선진국 중의 선진국으로 인식된다. G7 가입의 명시적 요건은 없으나, 과거의 선례를 보면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 규모(GDP)와 경제 발전 수준(1인당 GDP)을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의 GDP 순위는 2023년 전세계 14위(1.7조 달러)로 G7 국가 중 영국(3.3조 달러), 프랑스(3.0조 달러), 이탈리아(2.3조 달러), 캐나다(2.1조 달러)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1인당 GDP 순위는 2023년 전세계 35위(3만 3,192달러)로 한국, 일본, 이탈리아가 모두 3만 달러 대에 위치하고 있다.

특히, 최근인 2010~2023년 동안 GDP 및 1인당 GDP 증가율에서 한국은 미국을 제외한 G7 국가보다 월등히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다. 이 기간 동안의 각국 GDP 및 1인당 GDP의 연평균 증가율이 지속된다는 가정에서, 한국의 GDP 규모는 2030년 이탈리아를 추월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아직 확정치가 나오지는 않았으나, 한국의 2023년 1인당 GNI(국민총소득)이 3만 6,194달러로 일본의 3만 5,793달러를 추월한 것으로 나타난바, 1인당 GDP 기준으로도 한국은 일본과 거의 차이가 없거나 조만간 일본을 넘어설 것으로 분석된다.

■ G7 진입에 대한 한국 경제의 긍정적 요인

한국 경제가 G7 강국으로 진입하려고 할 때,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한국 경제의 장점은 ① 위기에 강한 경제 체질, ② 주력 섹터인 제조업의 성장성, ③ 미래를 위한 연구개발투자의 확대, ④ K-컬처의 글로벌 소프트 파워 확산, ⑤ 높은 인적 자본 수준 등을 들 수 있다.

① 위기에 강한 경제 체질

세계은행 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해 보면, 금융위기와 코로나 위기의 글로벌 경제 위기 직후 한국의 GDP 복원력은 주요 선진국은 물론 세계 평균보다 강한 것으로 분석된다. 통상 글로벌 경제위기가 발생하면, 특정 연도의 경제성장률이 크게 하락하고 그다음 연도의 경제성장률은 충격에 대한 복원력이 작용하면서 반등하게 된다. 글로벌 경제위기로 충격을 받았던 2009년의 금융위기와 2020년의 코로나위기

를 전후로 국가별 경제의 복원율을 계산해 보면, 우선 금융위기 전후(2008년 대비 2010년)의 GDP 복원율은 한국이 107.7%로 OECD 평균(99.5%)과 G7 평균(98.5%)은 물론 세계 평균(103.1%)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다음으로 코로나위기 전후(2019년 대비 2021년)의 GDP 복원율도 한국이 103.6%로 OECD 평균(101.5%)과 G7 평균(99.3%) 그리고 세계 평균(103.1%)보다도 높다.

② 주력 섹터인 제조업의 성장성

경제 성장력의 강도를 결정짓는 핵심 산업인 제조업의 물적자본축적(설비투자)과 지식자본축적(R&D 투자)의 강도가 약화되지 않고 있어 미래에도 높은 경쟁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 시장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 비중이 G7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은 한국 경제의 강점이라고 생각한다. 한국 경제에 있어서 제조업은 제한된 내수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해외 시장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중요한 산업이다. 한국 경제 내 제조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2021년 기준 35.6%로 G7 국가들(평균 23.7%)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다. 또한 한국 경제에 있어서 제조업은 성장잠재력의 원천인 자본축적(투자)과 기술혁신(R&D 투자)의 핵심이며, 여전히 제조업에서 물적 자본과 지식 자본의 지속적 축적이 빠르게 진행 중이다. 설비투자 규모는 명목 가격 기준으로 2022년 총 199조 9,000억 원에 달하며, 이중 제조업 설비투자 규모는 118조 4,000억 원으로 전체 설비투자의 약 59.2%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지식 자본축적을 위한 R&D 투자 규모는 2021년 현재 산업 부문에서 총 80조 8,000억 원이며, 이 중에서 제조업 R&D 투자 규모는 69조 5,000억 원으로 전체의 86.1%를 차지한다.

③ 미래를 위한 연구개발투자의 확대

부존자원이 부족한 한국 경제의 한계 속에서 기술이 경제 고도화의 핵심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연구개발투자를 통한 지식 자본축적에 주력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한국 경제는 오랜 기간에 걸쳐 R&D 투자 규모를 빠르게 확대하면서 경제 성장의 핵심 동인으로 물적 자본에서 기술 자본으로의 전환을 모색 중이다. 국내 총 R&D 투자(정부 + 민간) 규모는 2000년 13.8조 원에서 2021년 100조 원을 돌파하였으며, 2022년에는 112.6조 원에 달하고 있다. 한편 한국의 경제 규모 대비 R&D 투자 비율은 이스라엘 다음으로 높은 순위이다. 한국의 R&D 투자/GDP 비중은 통계가 집계된 1963년 0.2%에 불과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2년 현재 5.2%를 기록 중이다. 국제 통계 비교가 가능한 2021년을 기준으로 볼 때, 한국의 GDP 대비 R&D 투자 비율은 4.9%로 이스라엘(5.6%)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OECD 평균(2.3%)과 G7 평균(2.6%)을 크게 상회한다.

④ K-컬처의 글로벌 소프트 파워 확산

최근 K-컬처의 세계적인 확산이 단순한 문화 유행이 아니라, 국제 사회에 대한

소프트 파워를 크게 신장시켜 한류가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1990년대 말부터 시작된 한류가 1.0시대, 2.0시대, 3.0시대를 거쳐, 현재에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창조하는 4.0시대에 위치하면서 세계 시장에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특히, 문화컨텐츠 서비스(음향영상 및 관련서비스 + 음향영상 및 관련 지식재산권 복제 및 배포권 사용료) 교역은 2016년 3억 2,000만 달러의 흑자로 전환된 이후, 2023년 현재 수출 규모는 31억 4,000만 달러(수입 규모 18억 3,000만 달러)에 달하여 서비스수지는 약 13억 1,0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 중이다. 한편 한류의 확산은 서비스 교역에만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상품 교역에서 K-소비재(화장품, 의류, 음식 등) 수출의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우리 농수산 식품 수출 규모는 2017년 81억 8,000만 달러에서 2023년 108억 5,000만 달러로 급증하였다. 또한 K-뷰티로 대변되는 화장품 수출은 2017년 49억 6,000만 달러에서 2023년 84억 7,000만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다.

⑤ 높은 인적 자본 수준

2000년대 들어 한국의 고등교육 이수율이 빠르게 높아지면서 인적자본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모습이다. 한국의 고등교육이수율(Population with tertiary education)은 2022년 기준으로 69.6%로 OECD 국가 중 1위이며, OECD 평균(47.4%)과 G7 평균(51.2%)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이를 바탕으로 경제 활동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기술에 대한 습득 능력이 강화되면서 인적자본의 질적 수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실제 세계은행의 인적자본지수(HCI, Human Capital Index) 값을 살펴보면, 2020년 기준으로 한국은 0.799포인트로 싱가포르(1위, 0.879), 홍콩(2위, 0.813), 일본(3위, 0.805) 다음으로 4위를 기록하고 있다. 향후 경제 발전 단계가 높아질수록 인적자본이 중요시되는바, 이러한 인적자본의 높은 경쟁력은 한국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 G7 진입에 대한 한국 경제의 부정적 요인

한국 경제가 G7 강국으로 진입하는 과정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정적 요인으로는 ① 세계 경제의 중장기 저성장 국면 진입, ② 서비스업의 취약한 생산성, ③ AI 사회에 대한 불충분한 대비, ④ 그린 전환 트렌드에 불리, 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력의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① 세계 경제의 중장기 저성장 국면 진입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글로벌 경제가 중장기 저성장 국면으로 진입하면서, 해외 시장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성장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세계 경제성장률은 팬데믹 이전보다 확연히 낮아지는 장기 저성장 국면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IMF의 최근 전망치를 이용하여 계산해 보면, 세계 경제성장률은 팬데믹 이전(2011~2019년) 연평균 3.5%에서 팬데믹 이후

(2022~2029년) 3.2%로 하락할 것이 예측된다. 이는 기술체화(Technological embodiment)기의 도래, 보호무역주의의 확산과 경제블록화(China-exclusive), 중국의 중진국 함정(Peak China) 진입 등의 불안 요인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 경제가 내수 시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수출을 통해 시장의 외연을 확장하는 전략을 추구했기 때문인데, 이러한 글로벌 시장의 구조적 수요 위축은 우리 수출의 부진과 이에 따르는 한국 경제의 저성장으로 이어질 우려가 존재한다.

② 서비스업의 취약한 생산성

경제 내 제조업보다 비중이 높은 서비스산업 노동생산성이 과도하게 낮아 경제 전반의 성장 속도 저하의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의 전반적인 노동생산성은 여전히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이나 점차 근접하는 모습이다. 한국생산성본부의 통계에 따르면 인당 노동생산성(취업자당 노동생산성, PPP 적용 US\$)은 2021년 기준 전산업이 OECD 평균의 92% 수준, G7 평균의 86% 수준, 그리고 미국의 62% 수준이다.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은 2021년 기준 OECD 평균의 121%, G7 평균의 122%, 그리고 미국의 87% 수준으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반면, 서비스업의 인당 노동생산성은 2021년 기준 OECD 평균의 85%, G7 평균의 77%, 그리고 미국의 51% 수준으로 생산성이 크게 낮다. 특히, 서비스업/제조업 생산성 비율을 보면, 2010년 51.6%에서 2015년 52.9%로 반등하였으나, 2021년 47.5%로 다시 하락 추세로 전환되면서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뒤처지고 있다.

③ AI 사회에 대한 불충분한 대비

한국은 글로벌 산업 대전환의 한 축인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에 적합한 IT 친화적 인프라 시스템, 사회적 분위기, 문화 기반을 보유하고 있으나, 정작 디지털 전환의 핵심 기술인 AI와 관련해서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디지털 전환의 전제 조건은 경제의 디지털 경쟁력이 중요한데 한국은 높은 IT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IMD의 2023년 디지털 경쟁력(World Digital Competitiveness) 평가에서 1위인 미국을 100포인트로 했을 때, 한국은 94.8포인트로 전체 순위 6위를 기록하고 있다. 나머지 G7 국가들의 순위를 보면, 캐나다(11위, 91.98포인트), 영국(20위, 83.12포인트), 독일(23위, 80.86포인트), 프랑스(27위, 78.65포인트), 일본(32위, 75.43포인트), 이탈리아(43위, 64.39포인트)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IMF의 2023년 AI 준비지수(AI Preparedness Index)에서 한국은 0.727포인트로 조사 대상 174개국 중 15위에 그치고 있으며, G7 국가 중 한국보다 순위가 높은 국가는 미국(3위, 0.771포인트), 독일(9위, 0.753포인트), 일본(12위, 0.733포인트), 영국(13위, 0.731포인트) 등이다. 한편 HAI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요국의 AI 민간 투자 규모는 한국이 13.9억 달러로 낮은 수준은 아니나, 미국(672.2억 달러), 중국(77.6억 달러)은 물론 G7 중 영국, 독일, 캐나다, 프랑스 등

보다 작다. 특히, 동 조사에서 한국의 투자 규모는 2022년(31억 달러)보다 감소하였고, 순위도 2022년 6위에서 2023년에 9위로 하락하였다.

④ 그린 전환 트렌드에 불리

한국 경제·산업 구조는 그린 전환(Green Transformation) 트렌드에 불리하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한국 경제는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며, 특히 경제 성장의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BP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연간 원유소비량은 연간 약 10억 4,000만 배럴로 추정되는데, 이를 경제의 원유의존도(GDP 1만 달러당 원유소비량)로 계산해 보면 6.2배럴로, OECD 38개국 중 1위이며 중국(2.9배럴), 인도(5.6배럴)보다 높다. 이러한 배경으로 한국은 상대적으로 탄소 배출도 많은 단점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2021년 한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6억 2,680만 톤으로 208개국 중 7위(전세계 배출량의 1.65%)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GDP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톤/억 달러)은 한국이 인도, 중국, 튀르키예에 이어 4위에 해당된다. 한국 경제가 탄소배출이 많은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에너지 소비가 많고 화석 연료 의존도가 높은 중화학 공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가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린 전환을 위해 에너지 및 산업의 구조 개편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경제 성장과의 상충 관계를 극복해야 하는 당면 현안에 직면하고 있다.

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력의 부족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의 급감과 고령화의 가속으로 성장잠재력의 약화(물적 생산요소의 감소)와 사회·경제적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 세계은행의 통계에 의하면 2022년 현재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통계 이용이 가능한 전세계 258개국 중 홍콩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다. 이는 장래 주력 경제 활동 연령층인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서 성장잠재력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여 주고 있다. 통계청의 2023년 12월 기준 「장래인구추계」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생산가능인구/총인구 비중은 이미 2012년(73.4%)에 정점에 도달했으며, 향후 그 비중은 2030년에 66.6%, 2040년에 58.0%, 2050년에는 51.9%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생산가능인구가 급감하는 가운데 노령인구가 급증하면서 사회의 부양 부담이 높아지는 점도, 경제의 성장 감속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우려가 있다. 한국의 노령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5년 사상 최초로 1,000만 명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2018년에 고령사회(aged society, 노령인구 비중 14%), 2025년에는 드디어 초고령사회(hyper-aged society, 20% 이상)로 진입할 것이다. 나아가 노령인구 비중은 2030년에 25.3%, 2040년 34.3%, 2050년 40.1%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한국 사회 전반의 노령인구에 대한 부양 부담을 급증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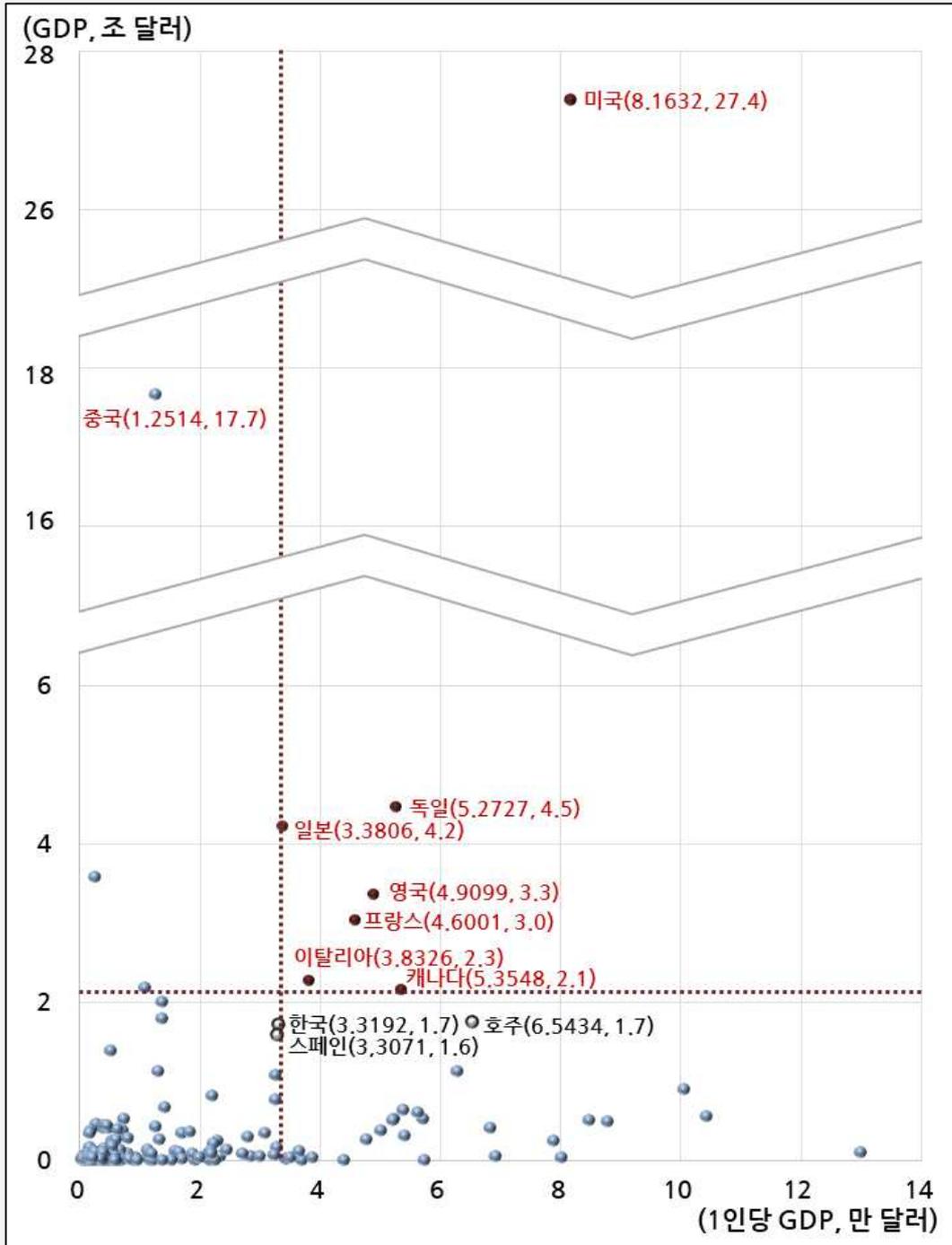
< G7 진입에 대한 한국 경제의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 >

긍정적 요인	부정적 요인
① 위기에 강한 경제 체질	① 세계 경제의 중장기 저성장 국면 진입
② 주력 섹터인 제조업의 성장성	② 서비스업의 취약한 생산성
③ 미래를 위한 연구개발투자의 확대	③ AI 사회에 대한 불충분한 대비
④ K-컬처의 글로벌 소프트 파워 확산	④ 그린 전환 트렌드에 불리
⑤ 높은 인적 자본 수준	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력의 부족

■ 시사점

한국 경제가 가지는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하여 G7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첫째, 대외 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하는 내수 부문의 체질 개선을 지속해야 한다. 둘째, 한국 경제 성장의 핵심인 제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산업계 내에서는 혁신 노력을 강화해야 하며, 정부 차원에서는 민간이 성과를 낼 수 있는 기반 조성에 주력해야 한다. 셋째, 미래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와 더불어 그 성과가 경제 전반의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연구개발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넷째, K-컬처의 소프트 파워 강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며, 나아가 관광, 소비재, 의료 등의 연계성을 높여야 한다. 다섯째, 한국 경제의 강점인 고도의 인적 자본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미래 노동 시장의 공급과 수요 간 불일치를 줄이기 위한 중장기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섯째, 세계 경제 전반의 만성적 수요 부족에 대응하여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고, 교역 시장의 분절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시장별 차별적 접근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 일곱째, 서비스 산업도 내수 시장을 벗어나 외연을 확장하고 기술 및 자본 집약도를 제고하여 부가가치 창출력을 강화시키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여덟째, AI 산업 생태계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산업 내 핵심 분야를 발굴·지원하고 AI 산업의 가장 중요한 생산 요소인 전문 고급 인력 확충에 주력해야 한다. 아홉째, 탄소 중립 사회 구현을 위한 합리적 에너지·산업 구조 전환과 탄소 저감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와 상용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열 번째, 성장잠재력 약화의 최대 걸림돌인 노동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여, 노동시장 구조의 유연성 확보, 출산율 제고,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촉진, 적극적인 이민정책 등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G7 경제 강국에 걸맞은 선진시민사회 구현을 위해 사회자본 확충에 주력해야 한다.

< 전 세계 국가의 GDP 및 1인당 GDP(2023년)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IMF 통계를 이용한 도시).

주: () 안의 값은 (1인당 GDP, GDP).

1. 개 요

- 한국의 빠른 경제 성장과 경제 발전 속도로 선진국 그룹이라 할 수 있는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를 넘어 선진국 중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G7(Group of Seven) 강국으로의 도약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 G7이란 선진국 중 미국 등 7대 경제 대국의 정상 회의와 각료급 회의를 의미하며, 가입국은 선진국 중의 선진국으로 인식
 - G7 회원국은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이탈리아
 - 1998년 러시아가 가입하면서 G8 체제로 작동한 적도 있었으나, 2014년 크림반도 사태로 러시아가 배제되면서 현재 G7 시스템을 유지 중임
 - 선진국 그룹의 대표적 그룹으로 우리나라도 가입한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¹⁾가 있으나, 콜롬비아 같은 경우 2023년 1인당 GDP가 6,972달러이며, 1만 달러대 국가도 칠레 등 4개국 포함되는 등 선진국 그룹이라고는 부르기 어려운 측면이 많음
 - 한편, G7이 확장된 G20이 있으나 G20 회원국의 가입 기준(전 세계 GDP 비중이 0.4%에 불과한 국가도 포함)에 불확실한 측면이 많고 면면을 보면 선진국 그룹이라고 부르기 어려움

< G20(Group of 20) 정상회의·재무장관회의(출처: 외교부) >

① 출범 배경

-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세계로 확산되면서 금융위기 상황과 관련된 제반 문제를 검토하고 새로운 국제금융·통화질서 수립 논의 필요성으로 구성

② G20 회원국

- G7(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이탈리아), 한국,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러시아, 터키, 남아프리카공화국, EU

1) 한국은 1996년 OECD 가입협정에 서명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 29번째 OECD 정회원국이 됨.

< G7 개요 >2)

	내 용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정치, 경제 사안에 대한 토의를 위한 G7 정상 간 대화협의체
창설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0년대 국제사회가 세계경제의 위기를 대처하는 과정에서 출범 ▪ 세계경제는 브레턴우즈 체제 붕괴(Bretton Woods system), 1973년 1차 석유 파동을 겪으면서, 통화가치 팽창, 저성장으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 경기후퇴, 보호무역주의 대두 등 어려운 상황에 직면, 이에 따라,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은 새로운 경제질서 수립방안 모색
운영 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 사무국이 없으며, 정상회의 개최국이 의장국으로서 회의 준비 ▪ 의장국이 정상회의 및 각료회의를 주도하여 관심 사항 협의 ▪ (정상회의) 정상 간 대화협의체로 국제정치·경제 사안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 ▪ (각료급 회의) 정상회의 사전에 분야별 각료급 회의를 개최(정상회의 준비), 정상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의 진행상황 검토
연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5) 1973년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재무장관은 백악관 도서관에서 Library Group 결성하여, 세계금융 이슈 논의, 1975년 일본의 참여로 G5 재무장관 체제 형성 ▪ (G6) 1975년 프랑스 랑부이예(Rambouillet)에서 개최된 회의에 이탈리아 참여로 최초의 G6 정상회의 개최 ▪ (G7) 1976년 미국의 희망에 의하여 캐나다가 참여하여 G7 정상회의로 확대, 1978년부터 EC 집행위원장 참여 ▪ (G8) 1998년 버밍엄 회의에서 러시아가 정식회원이 됨으로써 G8 체제 완성 ▪ (G7) 2014년 G7 국가들은 크림반도 사태에 대한 제재 조치로 러시아의 G8 국가로서의 자격 잠정 정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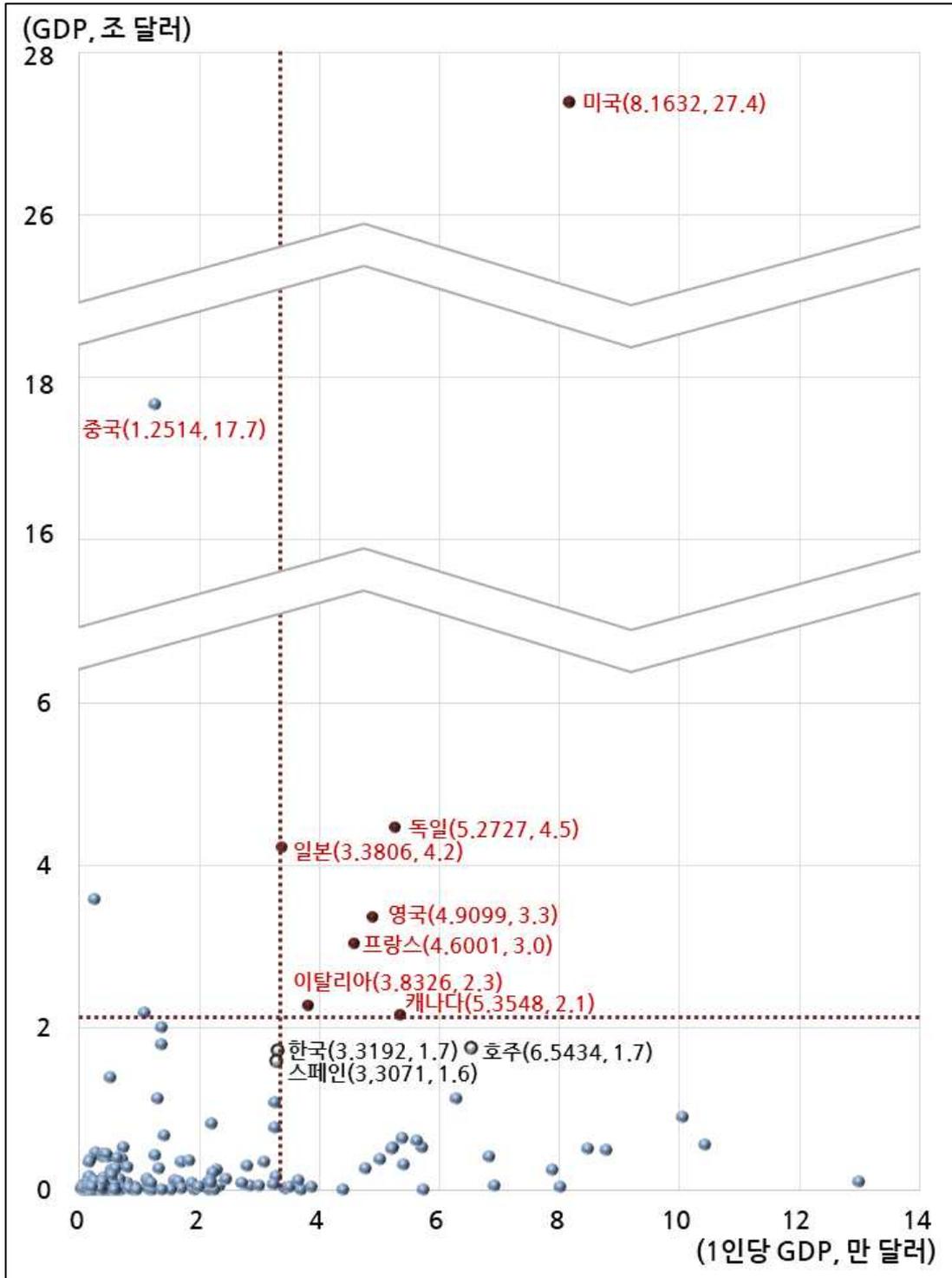
자료: 외교부, 기획재정부.

2) 2020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G7에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대한민국 등을 포함하여 G11 또는 G12로 확대하는 구상을 밝힌 바 있음.

- G7 가입의 명시적 요건은 없으나, 과거의 선례를 보면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 규모(GDP)와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 발전 수준(1인당 GDP)을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
 - 1973년 G5가 처음 출범할 당시 세계 경제의 4%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로 구성해야 함이 언급된 바 있음
 - 이후 1975년 프랑스 랑부이에(Rambouillet)에서 개최된 회의에 G6 회원국 자격 요건으로 ① 자유민주주의, ② 안정적이며 높은 경제발전도(1인당 GDP 최소 1만 1,000달러), ③ 세계 경제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모(세계 총 GDP의 4%)³⁾ 등이 언급됨
- 한국은 2023년 기준으로 경제 규모(GDP) 면에서는 이탈리아, 캐나다에 근접하고 있으며, 경제 발전 수준(1인당 GDP) 면에서는 일본과 이탈리아 수준
 - 한국의 GDP 순위는 2023년 전세계 14위(1.7조 달러)로 G7 국가 중 영국(3.3조 달러), 프랑스(3.0조 달러), 이탈리아(2.3조 달러), 캐나다(2.1조 달러) 수준에 근접함
 - 한국의 1인당 GDP 순위는 2023년 전세계 35위(3만 3,192달러)로 한국, 일본, 이탈리아가 모두 3만 달러 대에 위치하고 있음
 - 전 세계 국가 경제력 수준으로 가까운 시간 내 G7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는 한국, 스페인, 호주뿐임
- 한국은 짧은 산업화 역사 속에서도 고성장을 지속하여, 현재 G7에 근접하는 경제력과 경제 발전 수준을 달성
 - 한국의 경제 규모(GDP)는 1980년 65.4억 달러로 G7 평균(9,861억 달러)의 6.6%에 불과하였으나, 2023년 기준 25.6%에 달함
 - 또한, 한국의 경제 발전 수준(1인당 GDP)은 1980년 1,715달러로 G7 평균(1만 988달러)의 15.6%에 불과하였으나, 2023년 기준 65.4%에 달함

3) 외교부.

< 전 세계 국가의 GDP 및 1인당 GDP(2023년)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IMF 통계를 이용한 도시).

주: () 안의 값은 (1인당 GDP, GDP).

- 2010~2023년 동안 GDP 및 1인당 GDP 증가율에서 한국이 미국을 제외한 G7 국가보다 월등히 빠른 속도를 보이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 2010~2023년의 각국의 GDP 및 1인당 GDP의 연평균 증가율이 지속된다
는 가정에서, GDP 규모는 2030년 이탈리아를 추월할 것으로 예측됨
- 또한, 아직 확정치가 나오지는 않았으나, 한국의 2023년 1인당 GNI(국민
총소득)는 3만 6,194달러로 일본의 3만 5,793달러를 추월한 것으로 발표
되었기에, 따라서 1인당 GDP 기준으로도 한국은 일본과 거의 차이가 없
거나 조만간 일본을 넘어설 것으로 분석됨

< 주요국 GDP 및 1인당 GDP 추이 >

GDP (10억 달러)	1980	1990	2000	2010	2023	2010~2023 연평균증가율
G7	986	2,139	3,156	4,729	6,686	2.7%
미국	2,857	5,963	10,251	15,049	27,358	4.7%
독일	854	1,599	1,949	3,402	4,457	2.1%
일본	1,129	3,186	4,968	5,759	4,213	-2.4%
영국	605	1,197	1,669	2,488	3,345	2.3%
프랑스	702	1,272	1,366	2,647	3,032	1.0%
이탈리아	479	1,162	1,147	2,138	2,256	0.4%
캐나다	276	596	745	1,617	2,140	2.2%
한국	65	283	576	1,144	1,713	3.2%
스페인	231	536	599	1,423	1,581	0.8%
호주	163	324	400	1,255	1,742	2.6%

1인당 GDP (달러)	1980	1990	2000	2010	2023	2010~2023 연평균증가율
G7	10,988	22,198	27,916	43,052	50,734	1.3%
미국	12,553	23,848	36,313	48,586	81,632	4.1%
독일	11,110	20,249	23,925	42,380	52,727	1.7%
일본	9,672	25,810	39,173	45,136	33,806	-2.2%
영국	10,735	20,913	28,338	39,642	49,099	1.7%
프랑스	13,070	22,490	23,212	42,179	46,001	0.7%
이탈리아	8,497	20,501	20,153	35,816	38,326	0.5%
캐나다	11,281	21,572	24,297	47,626	53,548	0.9%
한국	1,715	6,610	12,263	23,077	33,192	2.8%
스페인	6,128	13,694	14,761	30,567	33,071	0.6%
호주	11,009	18,874	20,911	56,591	65,434	1.1%

자료: 현대경제연구원(IMF 통계를 이용한 계산).

2. G7 진입에 대한 한국 경제의 긍정적 요인

① 위기에 강한 경제 체질

- 세계은행 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해 보면, 금융위기와 코로나 위기의 글로벌 경제위기 직후 한국의 GDP 복원력은 주요 선진국은 물론 세계 평균보다 강한 것으로 분석
 - 통상 글로벌 경제위기가 발생하면, 특정 연도의 경제성장률이 크게 하락하고 그다음 연도의 경제성장률은 충격에 대한 복원력이 작용하면서 반등
 - 세계 경제가 동반 위기에 빠졌던 2009년 금융위기의 사례를 보면, 세계 경제성장률(IMF 통계 기준)은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3.1%에서 2009년 $\Delta 0.1\%$ 의 역성장을 기록하였으며, 이듬해인 2010년 5.4%로 상승함
 - 한국 경제성장률(한국은행 통계 2020년 기준연도)은 2008년 3.0%에서 2009년 0.8%로 하락한 후 다음 해인 2010년에 7.0%로 반등함
 - 2020년 코로나위기에서는, 세계 경제성장률(IMF 통계 기준)은 위기 직전인 2019년 2.8%에서 2020년 $\Delta 2.7\%$ 의 역성장을 기록하였으며, 이듬해인 2021년 6.5%로 상승함
 - 같은 기간 한국 경제성장률(한국은행 통계 2020년 기준연도)은 2019년 2.3%에서 2020년 $\Delta 0.7\%$ 로 급락한 후 2021년에 4.6%로 반등함
 - 글로벌 경제위기로 충격을 받았던 2009년의 금융위기와 2020년의 코로나위기를 전후로 국가별 경제의 복원율을 계산
 -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충격으로부터의 복원력을 비교하기 위해 세계은행의 국가별 GDP(2015년 불변가격 미 달러화 기준) 통계를 이용하여 금융위기와 코로나위기 충격이 발생하기 직전 연도의 GDP를 100포인트로 하는 GDP 지수(index)를 구축함
 - 이에 따라 GDP 복원율은 아래와 같은 식으로 계산되며, 그 의미는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충격으로부터 일정 시간 내 어느 정도 회복되는지에 대한 리질리언스의 강도임

$$\cdot GDP\text{복원률} = \frac{GDP_{\text{글로벌충격직후연도}}}{GDP_{\text{글로벌충격직전연도}}} \times 100$$

※ 글로벌 충격 직전 연도 → 글로벌 충격 연도 → 글로벌 충격 직후 연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9년) (2020년) (2021년)

- 금융위기 전후(2008년 대비 2010년)의 GDP 복원율은 한국이 107.7%로 OECD 평균(99.5%)과 G7 평균(98.5%)은 물론 세계 평균(103.1%)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

· 금융위기 직전 연도인 2008년의 GDP를 100포인트로 가정했을 때, 2009년 금융위기 당시 한국 GDP 지수는 100.8포인트이며, 이듬해인 2010년은 107.7포인트로 2008년 GDP 지수 대비 2010년 GDP 지수의 복원율은 107.7%에 달함

· 이는 OECD 평균(99.5%) 및 G7 평균(98.5%)과 세계 평균(103.1%)을 넘어 서며, G7 국가인 미국(100.0%), 일본(98.2%), 독일(98.2%), 영국(97.5%), 프랑스(99.0%), 이탈리아(96.3%), 캐나다(100.1%)보다 크게 높은 수준임

< 금융위기 전후 G7 및 한국의 GDP 지수 변화 >

(단위: 포인트)

	금융위기(2008년=100포인트)	
	2009년	2010년
World	98.6	103.1
OECD	96.6	99.5
G7	95.8	98.5
United States	97.4	100.0
Japan	94.3	98.2
Germany	94.3	98.2
United Kingdom	95.4	97.5
France	97.1	99.0
Italy	94.7	96.3
Canada	97.1	100.1
Korea, Rep.	100.8	107.7

자료: 현대경제연구원(세계은행 통계를 이용한 계산).

주: GDP지수는 GDP(constant 2015 USD) 통계에 대해 2008년을 기준치 100포인트로 조정.

- 다음으로 코로나위기 전후(2019년 대비 2021년)의 GDP 복원율은 한국이 103.6%로 OECD 평균(101.5%)과 G7 평균(99.3%) 그리고 세계 평균(103.1%)을 상회하는 수준
 - 코로나위기 직전 연도인 2019년의 GDP를 100포인트로 가정했을 때, 2020년 코로나위기 당시(2020년) 한국의 GDP 지수는 99.3포인트이고 2021년은 103.6포인트로 상승함
 - 이에 따라 한국 경제의 2019년 GDP 지수 대비 2021년 GDP 복원율은 103.6%를 기록함
 - 이는 OECD 평균(101.5%) 및 G7 평균(99.3%)을 넘어서며 세계 평균(103.1%)도 상회하는 수준임
 - 한편, G7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미국(103.5%)과 비슷한 GDP 복원율을 보임
 - 또한 G7 내 나머지 국가인 일본(98.3%), 독일(99.2%), 영국(97.4%), 프랑스(98.4%), 이탈리아(98.6%), 캐나다(100.0%)보다는 크게 높은 수준임

< 코로나위기 전후 G7 및 한국의 GDP 지수 변화 >

(단위: 포인트)

	코로나위기(2019년=100포인트)	
	2020년	2021년
World	97.1	103.1
OECD	96.0	101.5
G7	94.0	99.3
United States	97.8	103.5
Japan	95.9	98.3
Germany	96.2	99.2
United Kingdom	89.6	97.4
France	92.5	98.4
Italy	91.0	98.6
Canada	95.0	100.0
Korea, Rep.	99.3	103.6

자료: 현대경제연구원(세계은행 통계를 이용한 계산).

주: GDP지수는 GDP(constant 2015 USD) 통계에 대해 2019년을 기준치 100포인트로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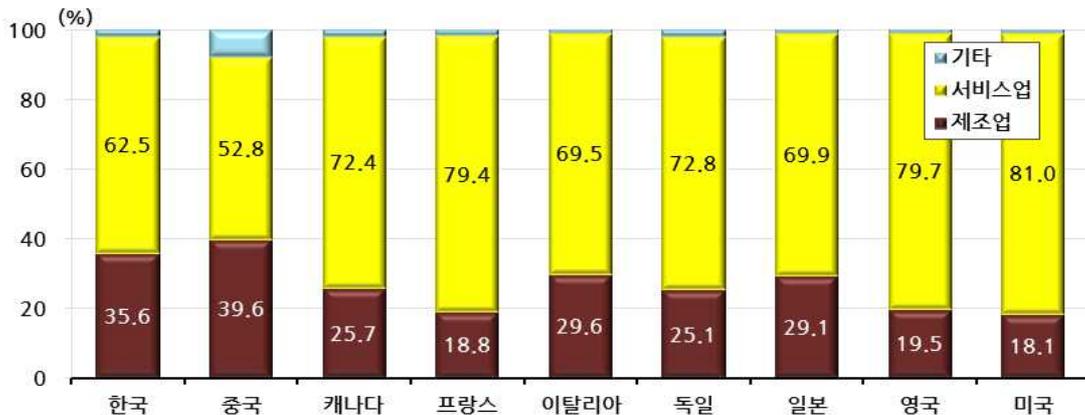
② 주력 섹터인 제조업의 성장성

○ 경제 성장력의 강도를 결정짓는 핵심 산업인 제조업의 물적자본축적(설비투자)과 지식자본축적(R&D 투자)의 강도가 약화되지 않고 있어 미래에도 높은 경쟁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해외 시장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 비중이 G7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이 한국 경제의 강점으로 작용

- 한국 경제 내 제조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2021년 기준 35.6%로 G7 국가들(평균 23.7%)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임
- 제한된 내수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해외 시장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한국 경제에 제조업은 중요한 산업임
- 한국 경제의 성장 주력 섹터인 제조업의 비중이 여전히 높다는 점은 그만큼 우리 제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유지되고 있으며 향후 한국 경제의 성장력을 결정지을 수 있는 핵심 섹터라는 것을 의미함

< 주요국 제조업 및 서비스업 비중(2021년)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UN 통계를 이용한 계산).

- 한국 경제에 있어서 제조업은 경제 전반의 성장잠재력 원천인 자본축적(투자)과 기술혁신(R&D 투자)의 핵심이며, 여전히 제조업에서 물적 자본과 지식 자본의 지속적 축적이 진행 중

- 성장잠재력의 원천인 자본축적을 위한 국내 설비투자 규모는 명목 가격

기준으로 2022년 총 199조 9,000억 원에 달하며, 이중 제조업 설비투자 규모는 118조 4,000억 원으로 전체 설비투자의 약 59.2%를 차지함

- 2022년 제조업 설비투자가 전체 설비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며, 2019년 이후 비중이 증가하는 모습임
- 지식 자본축적을 위한 R&D 투자 규모는 2021년 현재 산업 부문에서 총 80조 8,000억 원이며, 이 중에서 제조업 R&D 투자 규모는 69조 5,000억 원으로 전체의 86.1%를 차지함
- 특히, 1983년 이후 산업 부문 내 제조업 R&D 투자 비중은 86~90% 수준을 유지함

< 주요 산업 설비투자 규모 추이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한국은행 통계 이용).
주: 명목 기준.

< 주요 산업 R&D 규모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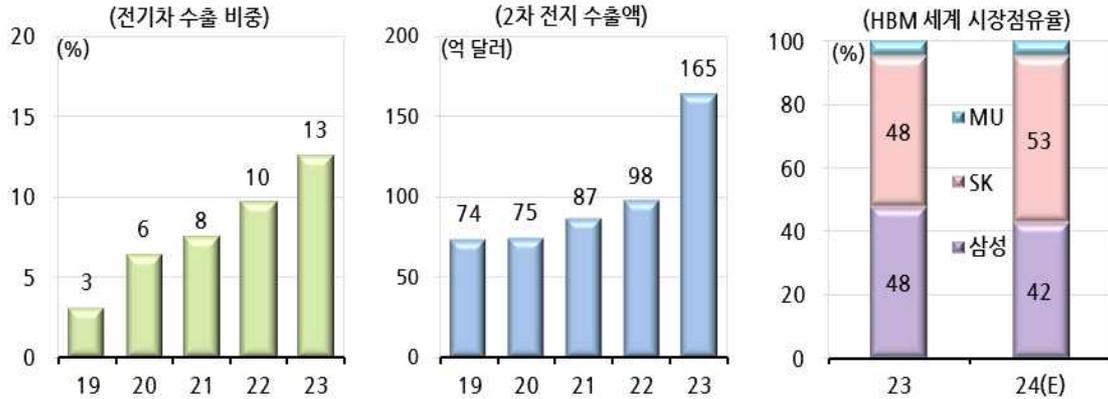
자료: 현대경제연구원(NTIS 통계 이용).

- 나아가 신흥공업국의 추격을 받고 있는 우리 제조업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 업종 내 고도화를 빠르게 추진하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

- 우리 주력 제조업 내 한계에 봉착하는 업종들도 있지만, 대부분 업종에서 주력 제품군을 기존 범용기술제품에서 신기술제품으로 빠르게 전환 중임
- 대표적으로 자동차 산업에서 전기차의 비중을 높여가고 있는데, 전기차/전체 자동차 수출 비중은 2019년 약 3%에서 2023년 13%로 증가함
- 화학 산업 내에서도 범용 제품에서 중국산과 경합도가 높아지면서, 전기차 시장 성장에 기대어 이차전지를 새로운 성장 동력화함
- 반도체 산업 내에서도 AI 시장의 확대에 맞추어 HBM(High Bandwidth

Memory, 고대역폭 메모리)에 집중하고 있는데, 우리 기업의 세계 HBM 시장 점유율은 2023년 현재 약 96%에 달하고 있음

< 新 수출 성장 동력 품목의 수출 추이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산업통상자원부, TrendFor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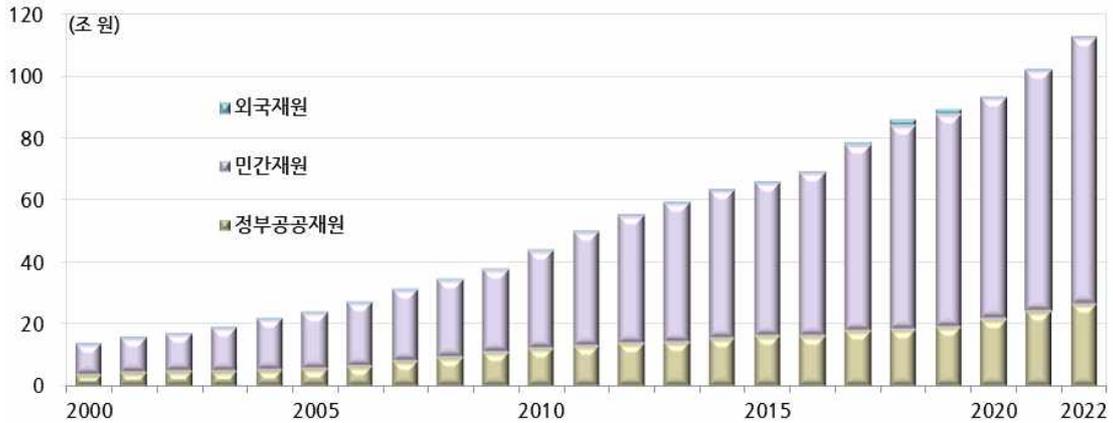
③ 미래를 위한 연구개발투자의 확대

○ 부존자원이 부족한 한국 경제의 한계 속에서 기술이 경제 고도화의 핵심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연구개발투자를 통한 지식 자본축적에 주력

- 한국 경제는 오랜 기간에 걸쳐 R&D 투자 규모를 빠르게 확대하면서 경제 성장의 핵심 동인으로 물질 자본에서 기술 자본으로의 전환을 모색

- 국내 총 R&D 투자(정부 + 민간) 규모는 2000년 13.8조 원에서 2021년 100조 원을 돌파하였으며, 2022년에는 112.6조 원에 달함
- 재원별로 보면 정부 R&D 예산은 2000년 3.8조 원에서 2022년 26.3조 원으로 연평균 9.2% 증가함
- 민간 R&D는 2000년 10.0조 원에서 2022년 86.0조 원으로 연평균 10.3% 증가함
- 국가 R&D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나 외국 재원에 의한 R&D는 2000년 약 83억 원에 불과하였으나 2022년 약 4,000억 원으로 증가함
- 이에 따라 총 R&D 규모는 2000년 13.8조 원에서 2022년 112.6조 원으로 연평균 10.0% 증가함

< 재원별 국가 R&D 투자 규모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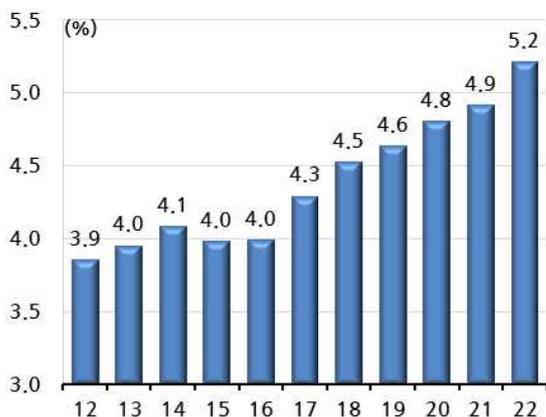
자료: NTIS, KISTEP,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최근 한국의 경제 규모 대비 R&D 투자 비율은 이스라엘 다음으로 높은 순위를 유지

- 한국의 R&D 투자/GDP 비중은 통계가 집계된 1963년 0.2%에 불과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2년 현재 5.2%를 기록함
- 국제 통계 비교가 가능한 2021년을 기준으로 볼 때, 한국의 GDP 대비 R&D 투자 비율은 4.9%로 이스라엘(5.6%)에 이어 세계 2위임
- 이는 OECD 평균(2.3%)과 G7 평균(2.6%)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임

- R&D란 미래의 성장잠재력을 위한 투자라는 점에서 한국 경제의 미래 성장 잠재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

< 한국의 R&D/GDP 비율 추이 >



자료: NTIS.

< 주요국 R&D/GDP 비율(2021년) >



자료: OECD, NTIS.

④ K-컬처의 글로벌 소프트 파워 확산

○ 최근 K-컬처의 세계적인 확산이 단순한 문화 유행이 아니라, 국제 사회에 대한 소프트 파워를 크게 신장시켜 한류가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

- 1990년대 말부터 시작된 한류가 이제는 글로벌 시장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
 - 한류는 1.0시대, 2.0시대, 3.0시대를 거쳐, 현재 글로벌 스탠다드를 창조하는 4.0시대에 위치함
 - 1997년 드라마 분야에서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 국한되어 시작된 한류는 이제는 음악, 드라마, 영화, 패션, 음식, 카툰, 게임, 행동양식, 전통문화 등의 전 분야에서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
- 문화컨텐츠⁴⁾ 서비스 교역은 2015년까지 적자를 지속하였으나 한류의 글로벌 확산으로 2016년 흑자로 전환된 이후 흑자 규모를 높여가는 추세
 - 음향영상 및 관련 서비스 교역을 보면, 2006년 수출⁵⁾ 규모는 1억 2,000만 달러이고 수입⁶⁾ 규모는 1억 8,000만 달러로 약 6,00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함
 - 2023년에는 수출 규모 18억 5,000만 달러 수입 규모 10억 1,000만 달러로 약 8억 5,0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함
 - 음향영상 및 관련 지식재산권 복제 및 배포권 사용료 교역에서는 2006년 수출 1억 4,000만 달러와 수입 7억 5,0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약 6억 1,000만 달러의 적자를 보임
 - 2023년에는 수출 12억 9,000만 달러와 수입 8억 2,000만 달러로 4억 6,000만 달러의 흑자를 달성함
 - 이에 따라 문화컨텐츠 서비스(음향영상 및 관련서비스 + 음향영상 및 관련 지식재산권 복제 및 배포권 사용료) 교역은 2016년 3억 2,000만 달러의 흑자로 전환된 이후, 2023년 현재 수출 규모는 31억 4,000만 달러(수입 규모 18억 3,000만 달러)에 달하여 서비스수지는 약 13억 1,000만 달

4) 문화컨텐츠 교역은 공식적인 용어가 아니며, 국제수지 통계상 ① 음향영상 및 관련 서비스와 ② 음향영상 및 관련 지식재산권 복제 및 배포권 사용료를 합하여 저자가 임의로 개념을 정의한 것임

5) 국제수지 통계상 공식적인 명칭은 수입(收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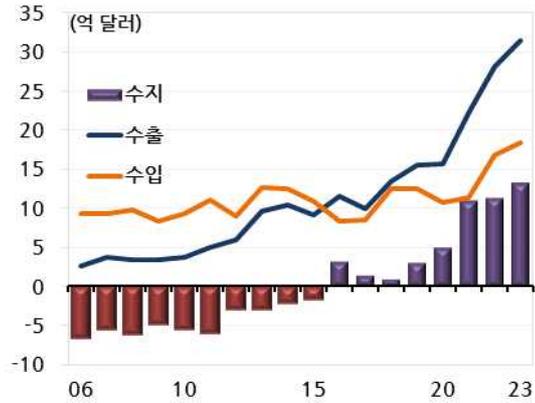
6) 국제수지 통계상 공식적인 명칭은 지급(支給).

러의 후자를 기록함

< 시기별 한류 주요 변천사 >

구분	시 기	특 징
한류 1.0	1997년 ~2000년대 중반	드라마 아시아
한류 2.0	2000년대 중반 ~ 2010년대 초반	드라마, K-POP 아주, 구주,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한류 3.0	2010년대 초반 ~2019년	드라마, K-POP, 영화 전 세계
한류 4.0	2020년 이후	K-Culture(드라마, K-POP, 영화, 한식, 전통 문화 등) 전 세계

< 문화컨텐츠 수출입 추이 >



자료: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현대경제연구원.

자료: 현대경제연구원(한국은행 통계 이용).

< 문화 콘텐츠 서비스 교역의 종류 >

① 음향영상 및 관련 서비스

- 영화, 라디오, TV 프로그램(생방송, 녹화방송), 뮤지컬녹화의 제작과 관련된 서비스 대가와 원본 원고, 음향녹음, 영화 등의 매매를 포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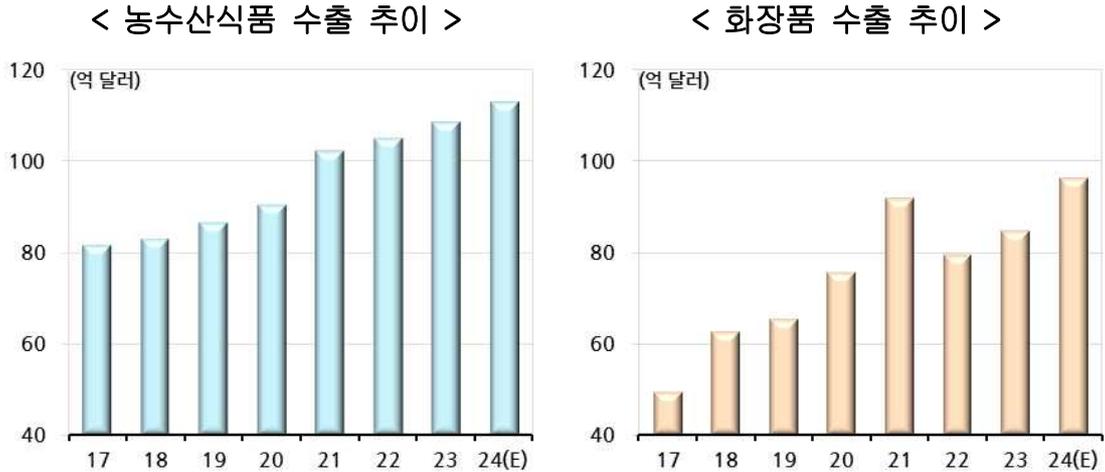
② 음향영상 지식재산권 복제 및 배포권 사용료

-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음악 등을 복제하거나 배포하기 위한 라이선스 및 대금

- 또한 한류의 확산은 서비스 교역에만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상품 교역에서 K-소비재(화장품, 의류, 음식 등) 수출의 동력으로 작용

- 최근 김치, 컵라면, 김 등의 식품 수출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며, 우리 농수산 식품 수출 규모는 2017년 81억 8,000만 달러에서 2023년 108억 5,000만 달러로 급증함
- 올해 상반기 농수산 식품 수출 규모는 56억 4,000만 달러로 2023년 상반기 규모 53억 6,000만 달러를 상회하면서 올해 연간 수출 실적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존재함
- K-뷰티로 대변되는 화장품 수출은 2017년 49억 6,000만 달러에서 2023년 84억 7,000만 달러로 크게 증가함
- 특히, 올해 상반기 화장품 수출 규모는 48억 1,000만 달러로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한 2021년(연간 91억 8,000만 달러) 상반기 규모(46억

1,000만 달러)를 넘어서고 있어 2024년 연간 수출이 다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산업통상자원부.
 주: 2024년은 상반기 실적을 이용한 예측치.

⑤ 높은 인적 자본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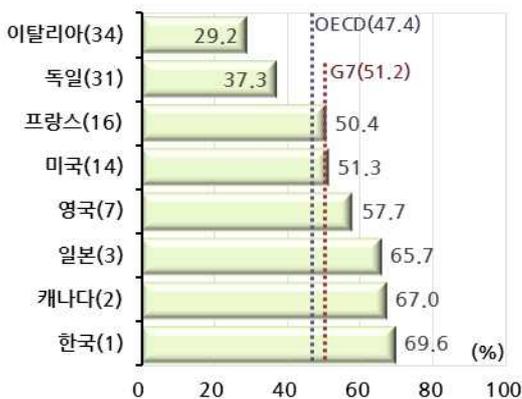
○ 2000년대 들어 한국의 고등교육 이수율이 빠르게 높아지면서 인적자본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모습

- 한국의 고등교육기관 이수율은 OECD 국가 중 1위일 정도로 매우 높은 수준
 - 한국의 고등교육이수율(Population with tertiary education)⁷⁾은 2022년 기준으로 69.6%에 달하고 있음
 - 이는 OECD 국가 중 1위로 OECD 평균(47.4%)과 G7 평균(51.2%)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임
 - 한국 다음으로는 캐나다(2위, 67.0%), 일본(3위, 65.7%), 아일랜드(4위, 57.7%), 룩셈부르크(5위, 60.0%) 등의 순서임
 - 한국의 고등교육이수율은 1995년 28.8%에서 2000년 36.8%, 2010년 61.4% 그리고 2022년 69.6%로 증가하는 추세임
 - 한편, 통계 이용이 가능한 국가들 중에서 2000년과 비교할 경우 한국은

7) 고등교육이수율이란 25-34세 인구 중 고등교육기관(대학, 전문대학, 직업학교 등을 총칭)을 졸업한 비율을 의미.

- 당시 6위로 미국(5위, 38.1%)보다 낮은 이수율을 기록했음
 - 이를 바탕으로 경제 활동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기술에 대한 습득 능력이 강화되면서 인적자본의 질적 수준 상승으로 이어짐
- 실제 한국 인적자본의 질적 수준은 글로벌 상위권에 해당되며, 이것이 한국 경제 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으로 작용
- 세계은행의 인적자본지수(HCI, Human Capital Index)⁸⁾ 값은 2020년 기준 0.799포인트로 싱가포르(1위, 0.879), 홍콩(2위, 0.813), 일본(3위, 0.805) 다음으로 4위를 기록함
 - 한국의 순위 이후의 주요 국가로는 캐나다(5위, 0.798), 영국(11위, 0.783), 프랑스(18위, 0.763), 독일(25위, 0.751), 이탈리아(30위, 0.728), 미국(35위, 0.702) 등이며 G7 평균값은 0.761임
- 향후 경제 발전 단계가 높아질수록 인적자본(human capital)이 중요시되는데, 이러한 인적자본의 높은 경쟁력은 한국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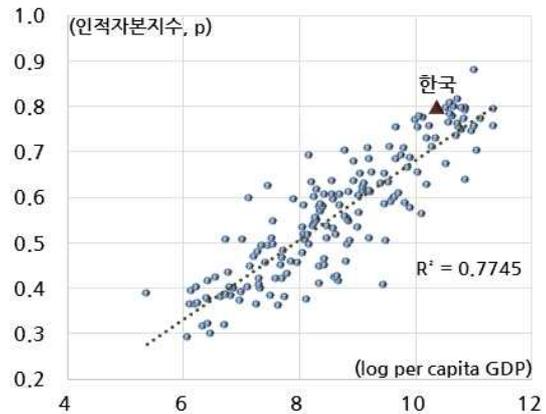
< 주요국 고등교육이수율(Population with tertiary education, 2022년)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OECD 통계를 이용한 계산).

주: 25~34세 중 고등교육기관 이수 비율.

< 국가별 인적자본지수 및 1인당 GDP(2020년)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세계은행 통계를 이용한 계산).

주: 인적자본지수는 0~1의 범위.

8) 인적자본지수(HCI, Human Capital Index)는 0~1의 범위를 가지며, 값이 높을수록 인적 자본 수준이 높음을 의미.

3. G7 진입에 대한 한국 경제의 부정적 요인

① 세계 경제의 중장기 저성장 국면 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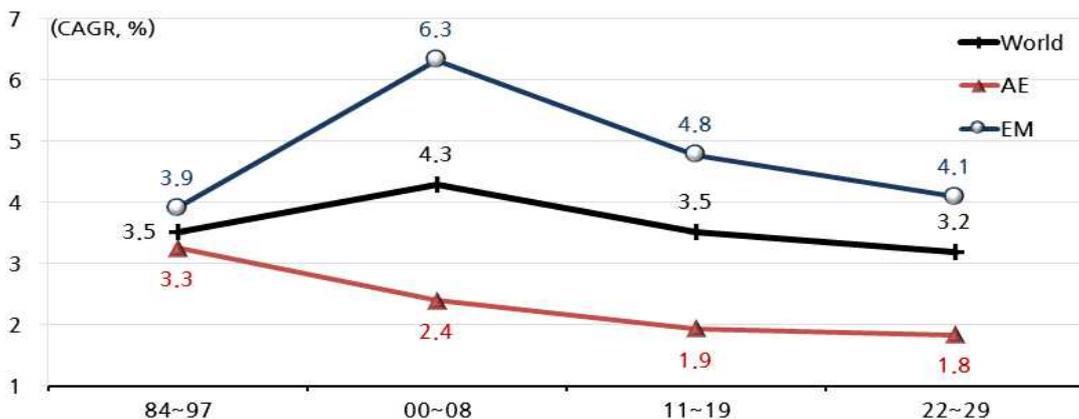
○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글로벌 경제가 중장기 저성장 국면으로 진입하면서, 해외 시장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성장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존재

- 코로나 팬데믹 이후 세계 경제성장률은 팬데믹 이전보다 확연히 낮아지는 장기 저성장 국면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

- IMF의 최근 전망치를 이용하여 계산해 보면, 세계 경제성장률은 금융위기 이전(2000~2008년) 연평균 4.3%에서 금융위기 이후 팬데믹 이전(2011~2019년) 연평균 3.5%로 하락함

- 나아가 팬데믹 이후(2022~2029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3.2%로 더 낮아질 것으로 예측됨

< 시기별 세계 경제성장률 추이 및 전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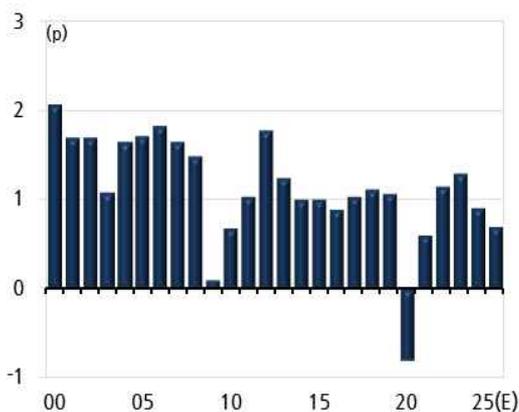


자료: 현대경제연구원(IMF 통계를 이용한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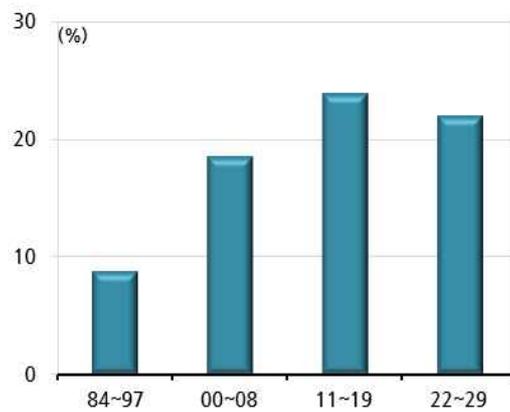
- 세계 경제성장률의 하락은 기술체화(Technological embodiment)기의 도래, 보호무역주의의 확산과 경제블록화(China-exclusive), 중국의 중진국 함정 (Peak China) 진입 등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

- (기술체화기의 도래) 3차 산업혁명기와 4차 산업혁명 사이의 과도기에 해당되며, 신기술이 시장에 전면적으로 확산되기까지의 시간을 의미함. 기존 산업의 구조조정과 신기술의 비즈니스 모델이 정착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며 이때 경제 전반의 성장력이 약화될 수 있음
 - (보호무역주의의 확산과 경제블록화) GVC의 약화와 DVC 비중의 증가로 세계 교역탄성치가 2023년 1.3p에서 2024년 0.9p 그리고 2025년에 0.7p로 하락함. 이에 따라 세계 경제가 교역으로 창출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감소하면서 세계 경제 전반의 성장률을 하락시킴
 - (중국의 중진국 함정 진입) 중국 경제가 중진국 함정에 빠져 저성장 국면에 진입하면서, 세계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가장 큰 원인은 중국이 경제 수준의 추가적인 도약이 필요하지만, 이미 경제가 노쇠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임⁹⁾
- 한국 경제가 내수 시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수출을 통해 시장의 외연을 확장하는 전략을 추구했기 때문인데, 글로벌 시장 수요 위축은 우리 수출의 부진과 이에 따르는 한국 경제의 저성장으로 이어질 우려가 존재

< 세계 교역탄성치(교역증가율/경제성장률) 추이 >



< 중국 경제의 세계 경제 성장 기여율 추이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IMF 통계를 이용한 계산).

9) 중국의 생산가능인구 비중의 정점은 이미 2010년에 도래했으며 당시 1인당 GNI는 4,340달러에 불과함, 반면 아시아 선진국인 한국의 정점 도래 시기는 2012년으로 당시 1인당 GNI는 26,865달러, 일본은 1992년으로 당시 1인당 GNI는 31,030달러임.

② 서비스업의 취약한 생산성

○ 경제 내 제조업보다 비중이 높은 서비스산업의 노동생산성이 과도하게 낮아 경제 전반의 성장 속도 저하의 원인으로 작용할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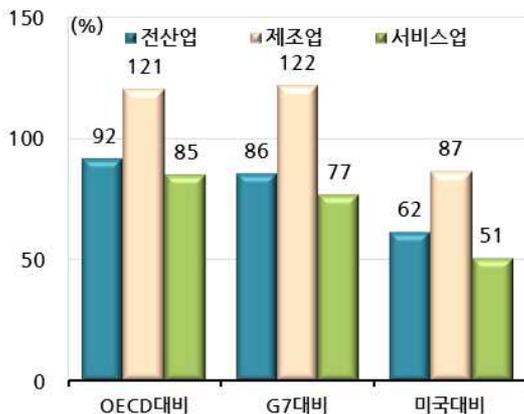
- 한국의 전반적인 노동생산성은 여전히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이나 점차 근접하는 모습

- 한국생산성본부의 통계에 따르면 인당 노동생산성(취업자당 노동생산성, PPP 적용 US\$)은 2021년 기준 전산업이 OECD 평균의 92% 수준, G7 평균의 86% 수준, 그리고 미국의 62% 수준에 불과함

- 그러나, 제조업 노동생산성이 선진국 수준을 넘어서고 있으나 서비스업 생산성은 낙후되어 있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생산성 격차가 확대

- 한국생산성본부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 제조업의 인당 노동생산성은 2021년 기준 OECD 평균의 121%, G7 평균의 122%, 그리고 미국의 87% 수준으로 비교적 높은 편임
- 반면, 우리 서비스업의 인당 노동생산성은 2021년 기준 OECD 평균의 85%, G7 평균의 77%, 그리고 미국의 51% 수준으로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크게 낮은 모습을 보임
- 국내로 한정하여 서비스업/제조업 생산성 비율을 보면, 2010년 51.6%에서 2015년 52.9%로 반등하였으나, 2021년 47.5%로 다시 하락 추세로 전환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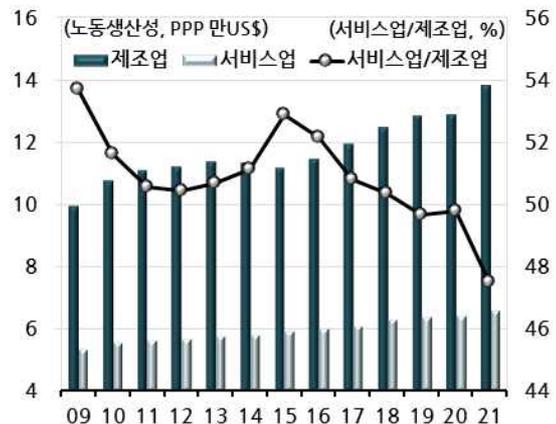
< 선진국 대비 한국 노동생산성(인당, 2021년) >



자료: 한국생산성본부.

주: 각국의 구매력을 고려한 PPP 달러 기준.

< 한국 제조업 및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인당) 추이 >



자료: 한국생산성본부.

주: 각국의 구매력을 고려한 PPP 달러 기준.

③ AI 사회에 대한 불충분한 대비

○ 한국은 글로벌 산업 대전환의 한 축인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에 적합한 IT 친화적 인프라 시스템, 사회적 분위기, 문화 기반을 보유하고 있으나, 정작 디지털 전환의 핵심 기술인 AI와 관련해서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

- 디지털 전환의 성공 여부는 경제의 디지털 경쟁력이 중요한데 한국은 높은 IT 경쟁력을 보유

- IMD(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의 2023년 디지털 경쟁력(World Digital Competitiveness) 평가¹⁰에서 1위인 미국을 100포인트로 했을 때, 한국은 94.8포인트로 전체 순위 6위를 기록함¹¹)
- 나머지 G7 국가들의 순위를 보면, 캐나다(11위, 91.98포인트), 영국(20위, 83.12포인트), 독일(23위, 80.86포인트), 프랑스(27위, 78.65포인트), 일본(32위, 75.43포인트), 이탈리아(43위, 64.39포인트)임

< IMD 디지털 경쟁력 평가 지수 상 한국 순위 추이 >



자료: IMD World Digital Competitiveness.

< IMD 디지털 경쟁력 평가 부문별 순위 >

대분야	하위분야	2022	2023
Future readiness	Adaptive attitudes	1	1
	Business agility	2	3
	IT integration	14	12
	Technology	13	12
Technology	Regulatory framework	23	26
	Capital	15	24
	Technological framework	7	8
Knowledge	Talent	33	31
	Training & education	16	6
	Scientific concentration	3	2
			16

자료: IMD World Digital Competitiveness.

- AI가 디지털 전환의 핵심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사회의 AI에 대한 대비는 기술 및 산업 선도국에 비해 충분하지 않은 편

- IMF의 2023년 AI 준비지수(AI Preparedness Index)¹²에서 한국은 0.727

10) 64개국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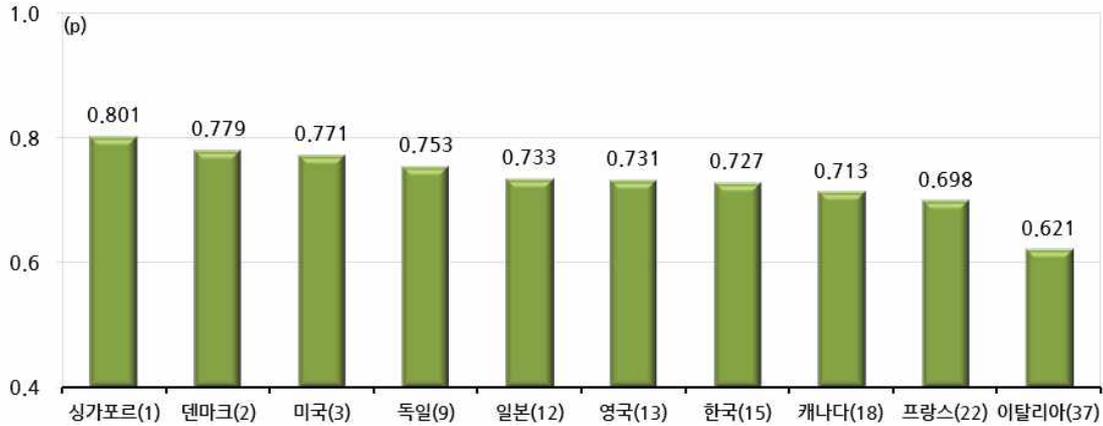
11) 특히, 인구 2,000만 명 이상 국가(27개국) 중에서 한국은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

12) AI 준비 지수(AIPI)는 국가의 디지털 인프라, 인적 자본 및 노동 시장 정책, 혁신 및 경제 통합, 규제 및 윤리를

포인트로 조사 대상 174개국 중 15위를 차지함

- G7 국가 중 한국보다 순위가 높은 국가는 미국(3위, 0.771포인트), 독일(9위, 0.753포인트), 일본(12위, 0.733포인트), 영국(13위, 0.731포인트)이며, G7 평균은 0.720포인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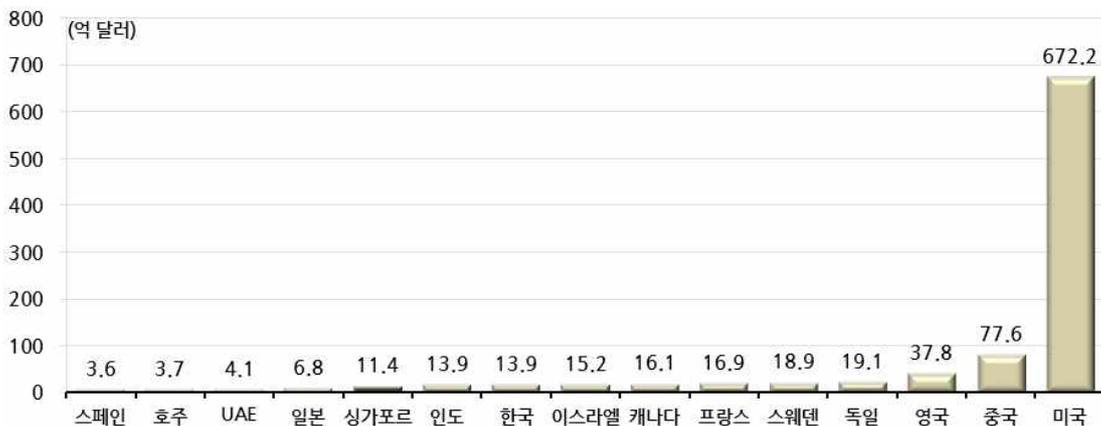
< IMF AI 준비지수(AI Preparedness Index, 2023년) >



자료: IMF. 주: ()은 순위

- 한편, HAI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요국의 AI 민간 투자 규모는 한국이 13.9억 달러로 낮은 수준은 아니나, 미국(672.2억 달러), 중국(77.6억 달러)은 물론 영국, 독일, 캐나다, 프랑스 등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한국의 투자 규모는 2022년(31억 달러)보다 감소하였으며, 순위도 2022년 6위에서 2023년에 9위로 하락함

< 주요국 AI 민간 투자 규모(2023년) >



자료: HAI(Stanford Institute for Human-Centered Artificial Intelligence) 「Artificial Intelligence Index Report 2024」.

포괄하는 거시구조 지표를 기반으로 174개국의 AI 준비 수준을 평가. 0에서 1까지의 값을 가지며 값이 클수록 AI에 대한 준비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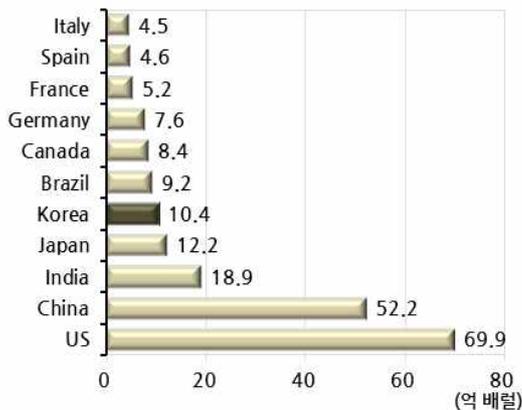
④ 그린 전환 트렌드에 불리

○ 한국 경제는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과 더불어 글로벌 산업 대전환의 양대 축을 구성하는 그린 전환(Green Transformation) 트렌드에 불리한 경제·산업 구조를 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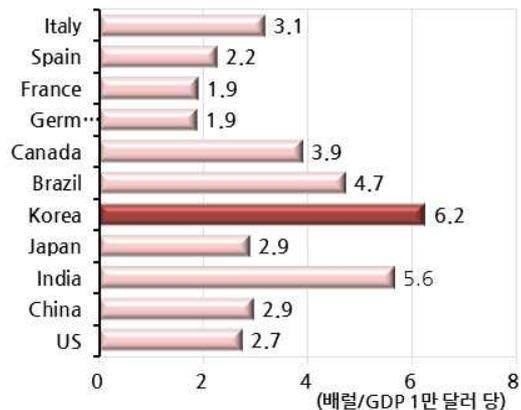
- 한국 경제는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며, 특히 경제 성장의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

- BP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연간 원유소비량은 연간 약 10억 4,000만 배럴임
- 2022년 기준 한국의 GDP 1만 달러당 원유소비량은 6.2배럴로 OECD 38개국 중 1위이며, 중국(2.9배럴), 인도(5.6배럴)보다 높은 수준임

< 주요국 연간 원유 소비량(2022년) >



< 주요국 경제의 원유의존도(2022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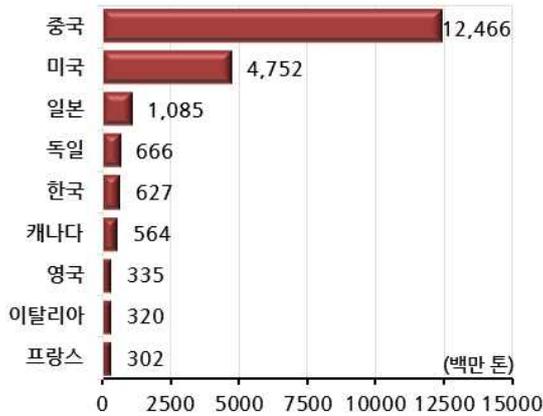


자료: 현대경제연구원(BP, IMF 통계를 이용한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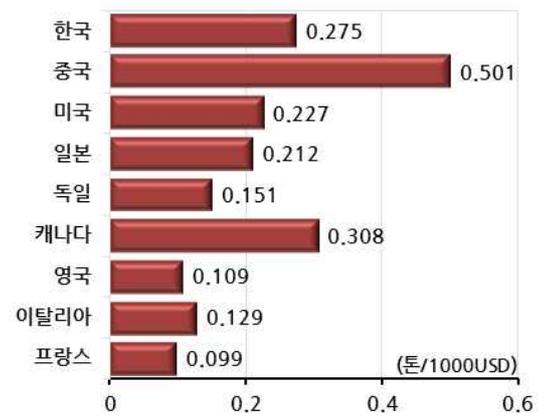
- 이러한 배경으로 한국은 상대적으로 탄소 배출도 많은 단점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

- 2021년 한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6억 2,680만 톤으로 208개국 중 7위를 기록함(전세계 배출량의 1.65%)
- 한편, GDP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톤/억 달러)은 한국이 인도, 중국, 튀르키예에 이어 4위를 기록함

< 주요국 이산화탄소 배출량(2021년) >



< 주요국 GDP당 이산화탄소 배출량(2021년) >



자료: European Commission EDGAR.

주: 화석 연료 소비기준.

- 한국 경제가 탄소배출이 많은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중화학공업 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향후 저탄소 시대로 진입에 하는 데에 많은 난관 예상
 - 한국 경제는 에너지 소비가 많고 화석 연료 의존도가 높은 중화학공업 중심의 산업 구조임
 - 한편, 한국도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하였기 때문에 에너지 및 산업의 구조 개편의 필요성이 대두됨
 - 따라서 그린 전환을 위해 경제 성장의 일부를 포기해야 하는 상충 관계를 극복해야 하는 당면 현안에 직면함

< 주요국 중화학공업¹³⁾ 비중 >



자료: OECD STAN.

주: 한국 2018년, 미, 영, 독, 일은 2019년 기준.

< 국내 산업별 온실가스배출량(2022년) >



자료: 한국에너지공단.

13) 원칙적으로 중화학공업(重化學工業)의 정의는 기계, 철강, 운송기기 등의 중공업(重工業)과 석유화학, 시멘트 등의 화학공업(化學工業)을 합한 것이나, 여기서는 IT, 가전 등의 전자·전기 산업까지 포함.

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력의 부족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의 급감과 고령화의 가속으로 성장잠재력의 약화(물적 생산요소의 감소)와 사회·경제적 부담 증가가 우려

- 현재 한국의 출산율은 OECD는 물론 전 세계에서 실질적(홍콩 제외)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

- 한국 사회의 합계출산율은 1960년 5.95명, 1970년 4.53명, 1980년 2.82명으로 점차 낮아짐
- 이후 1984년(1.74명)에 2명 선이 붕괴되었고, 2018년(0.98명)에는 1명 이하로 급락함
- 2022년 현재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현재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통계 이용이 가능한 전세계 258개국 중 홍콩 다음으로 낮은 수준을 기록함

< 주요국 합계출산율(Fertility rates, 2022년) >



자료: 세계은행.

주: 합계출산율은 가임기간(15~49세)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

- 이는 장래 경제 활동의 주력 연령층인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이어지면서 성장잠재력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통계청의 2023년 12월 기준 「장래인구추계」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생산가능인구/총인구 비중의 정점은 2012년(73.4%)이며 생산가능인구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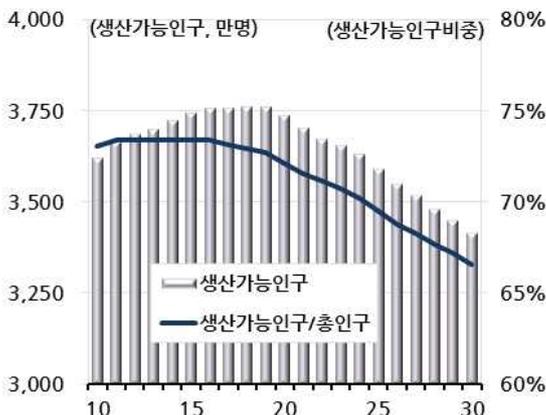
정점은 2019년으로 약 3,762만 8,000명(생산가능인구/총인구 비중 72.7%
 임

- 미래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2030년에 66.6%, 2040년에 58.0%, 2050년에는 51.9%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 생산가능인구 규모 자체는 2030년에 3,416.6만 명, 2040년에 2,902.9만 명, 2050년에는 2,444.8만 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생산가능인구가 급감하는 가운데 노령인구가 급증하면서 부양 부담이
 높아지는 점도, 경제의 성장 감속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상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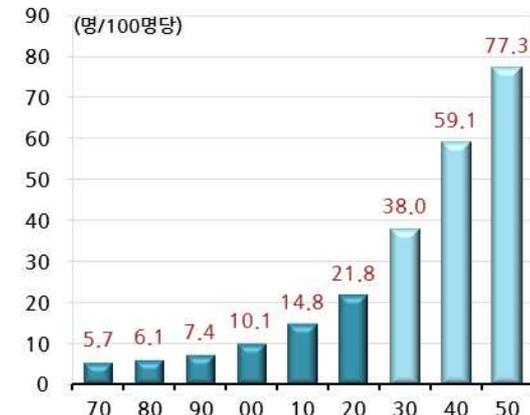
- 한국의 노령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5년 사상 최초로 1,000만 명
 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
- 한국은 2018년 고령사회(aged society, 노령인구 비중 14%), 2025년에 초
 고령사회(hyper-aged society, 20% 이상)로 진입할 것으로 판단됨
 ※ 고령화 사회 → 초고령사회 소요 기간: 한국 25년, 프랑스 156년, 영국 92년,
 미국 86년, 일본 36년
- 특히, 노령인구 비중은 2030년 25.3%, 2040년 34.3%, 2050년 40.1%로 지속
 적으로 증가하면서, 한국 사회의 노령인구에 대한 부양 부담을 급증시킬
 것으로 예상됨
 ※ 노년부양비(65세이상인구/생산가능인구)는 2020년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21.8
 명에서 2030년 38.0명, 2050년에는 77.3명으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생산가능인구(15-64세) 및 비중 추이 및 전망 >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3.12)」.

< 노년부양비(65세이상인구/생산가능인구) 추이 및 전망 >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3.12)」.

4. 시사점

첫째, 대외 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하는 내수 부문의 체질 개선을 지속해야 한다.

-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외 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단계별 비상 계획 마련 등을 통해 글로벌 경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임
- 세계 경제의 성장 동력 약화로 인한 글로벌 위기의 상시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대외충격 파급경로의 관리가 필요함
 - 수출 시장과 품목의 다변화를 통해 교역 경로를 통한 특정 지역의 위기 전염 영향을 낮추어야 할 것임
 - 통상 대외충격의 주된 파급경로인 금융 및 외환 시장 안정성을 제고시켜 해외 요인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 나가야 함
- 또한 항상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제시되는 가계 부채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계 실물 자산의 유동화, 가계 부채 만기 장기화 등의 노력이 요구됨

둘째, 한국 경제 성장의 핵심인 제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산업계 내에서는 혁신 노력을 강화해야 하며, 정부 차원에서는 민간이 성과를 낼 수 있는 기반 조성에 주력해야 한다.

- 산업계 내에서는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에 주력해야 할 것이며, 신흥공업국의 빠른 추격으로 경쟁이 격화되는 사업 부문에 대해서 사업 철수, 생산 기지의 해외 이전, 타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등에 대한 신속한 의사 결정으로 산업 합리화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임
- 제조업 혁신 기반 구축을 위해 4T(Tax, Trade, Technology, Talent)¹⁴의 네

가지 영역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전략이 요구됨

- (Tax) 세제 면에서 제조업 혁신 목적의 연구개발, 인력육성,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충해야 할 것임. 또한 법인세수 비중과 주요국의 법인세율 인하 경향에 대응해, 법인세 실효세율이 올라가지 않도록 정책 운용이 요청됨
- (Trade) 교역 면에서는 시장 진입과 무역 투자에 대한 장벽을 낮추고, 사업 활동과 관련된 불필요한 규제를 최소화해야 함
- (Technology) 기술에서는 차세대 '한국형 제조 비즈니스 모델'과 연계된 과제 개발하고, 기술 수요 해소와 기술 이전 정도를 제고할 수 있는 산학연 공동협력 방안이 요구됨
- (Talent) 인력 면에서는 차세대 제조업 모델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을 지정하고, 융합형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다양한 교육 과정의 개발·확산을 도모해야 할 것임

셋째, 미래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와 더불어 그 성과가 경제 전반의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연구개발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 민간과 정부의 국가연구개발의 역할 분담 구조 확립, 정부 연구개발사업의 성과성 제고 등을 통해 산업계의 빠른 기술혁신을 도모할 수 있는 효율적인 연구개발 생태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임
- 민간 R&D에 개방형 혁신 바람을 불어 넣기 위해서는 폐쇄적 기업 문화의 전향적 개선, R&D의 효율적 아웃소싱 생태계 조성, 지적재산권 제도의 업그레이드 등과 같은 다양한 노력이 요구됨
- 한편 공공 R&D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출연 연구소의 임무 지향형 역할 강화 등의 전문적이고 실효적인 거버넌스가 요구됨

14) 로버트 앳킨슨 등은 제조업 혁신을 유인할 정책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세제(Tax), 교역(Trade), 기술(Technology), 인력(Talent)” 등 네 영역을 제시함.

넷째, K-컬처의 소프트 파워 강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며, 나아가 관광, 소비재, 의료 등의 연계성을 높여야 한다.

-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K-컬처를 인식하고 정부 정책적, 제도적 지원 확대가 필요함
- 한류, 의료 등 관광자원의 대외 홍보 강화, 합리적인 출입국 절차 개선 등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수요 확대를 도모해야 할 것임
- 한편, 장기적으로는 외국인 방한 관광객의 재방문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관광 상품 개발에 주력하고 관광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다섯째, 한국 경제의 강점인 고도의 인적 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미래 노동 시장의 공급과 수요 간 불일치를 줄이기 위한 중장기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미래 산업 구조에 대한 예측을 통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력 수요와 고등교육기관의 인력 공급 간의 불일치를 최대한 줄여나가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고등교육기관의 혁신적인 학제 개편 노력이 요구됨
- 특히, 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적극적인 과학·기술 인력을 육성해야 할 것이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한 신진 교수진의 확충과 시장의 트렌드를 따라갈 수 있는 커리큘럼의 개발이 요구됨
- 한편, 산업계 내에서도 업종별 협회를 중심으로 부가가치사슬 단계별, 기술별 미래 인력 수요에 대한 예측을 제시하고 정책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인적 자본 수급 로드맵을 마련해야 할 것임

여섯째, 세계 경제 전반의 만성적 수요 부족에 대응하여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고, 교역 시장의 분절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시장별 차별적 접근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

- 대외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리스크 관리 중심의 정책 비중을 제고하고, G2 이외의 적극적인 시장 공략, 원자재·소재·부품·장비의 공급망 안전성 강화 등을 통해 시장 접근성 확보에 주력해야 할 것임
- 한편, 세계 경제 전반의 저성장은 자국 산업에 대한 보호무역주의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주요 수출 시장에서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움직임에 예의 주시하고 정부 차원의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특히, 미국의 정치 불안정성에 따른 포퓰리즘 확산이 가져올 시장의 규제 강도 변화와 미·중 갈등 격화에 따른 시장분절화(경제블록화) 심화 가능성에 적극 대비해야 할 것임
-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중국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을 예의주시하고, 중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기업은 우리 금융·통상 당국과의 소통 채널을 강화하여 유연하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공조 체제 구축이 요구됨

일곱째, 서비스 산업도 내수 시장을 벗어나 외연을 확장하고 기술 및 자본 집약도를 제고하여 부가가치 창출력을 강화시키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 제조업과 비교해 내수 지향적 특성을 가지는 서비스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서비스 산업도 내수 시장을 넘어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노력이 필요함
- 근본적으로는 M&A 활성화를 통한 영세성 극복, R&D 자본 확충을 통한 지식기반화 등으로 서비스 산업의 고부가화·고기술화를 목표로 하는 중장기 산업 발전 전략이 마련되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여덟째, AI 산업 생태계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산업 내 핵심 분야를 발굴·지원하고 AI 산업의 가장 중요한 생산 요소인 전문 고급 인력 확충에 주력해야 한다.

- 글로벌 경제·산업 구조의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는 추세에 맞추어 AI 산업 내 핵심 분야에 대한 관련 투자가 집중될 수 있도록, 정부는 물론 민간에서도 기술과 시장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분석이 요구됨
 - 최근 산업계의 AI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과도한 장밋빛 시장 전망으로 2000년대 초 닷컴 버블 붕괴의 재현 우려가 있기 때문에, AI 시장 내 다양한 기술 트리에서 옥석을 가릴 수 있는 능력이 절실함
- 한편, 국가 차원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디지털 사회가 요구하는 유연·창의·융합형 인재 교육의 확산과 AI 고급 인력의 체계적인 육성이 필요함
 - 특히, AI 고급 인력의 유출을 막고 해외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인 인센티브 정책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아홉째, 탄소 중립 사회 구현을 위한 합리적 에너지·산업 구조 전환과 탄소 저감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와 상용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경제·산업 구조 개선이 필요하며, DT 및 GT 관련 산업, 제조업 지원 서비스업, 관광업 등과 같이 골똥 없는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책 마련 및 실효성 있는 추진이 요구됨
-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에너지 소비 억제를 위해, 전력, 공업용 연료 등의 에너지 투입재 절감 정도에 따른 인센티브 도입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탄소중립 실현의 기본적 전제가 되기도 하는 신·재생 에너지 연구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하고, 더 시급하게는 우리 중화학 공업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탄소저감 기술의 확보와 상용화가 빠르게 추진되어야 할 것임

열 번째, 성장잠재력 약화의 최대 걸림돌인 노동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여, 노동 시장 구조의 유연성 확보, 출산율 제고,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촉진, 적극적인 이민정책 등이 필요하다.

- 가까운 시일 내에 노동 인구의 절대적 부족 현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마찰적 실업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노동시장 구조의 유연성 제고 노력이 필요함
- 경제가 필요로 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생산가능인구 확보를 위해 출산율 제고, 여성경제활동참가 확대, 적극적인 이민정책 등에 대한 정책적 비중이 높아져야 할 것임
 - 출산율 제고를 위해 출산 가구에 대한 주거 인센티브 제공, 육아 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 등의 보다 적극적인 재원 할당이 필요함
 -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와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 보육 시설 확충 등의 노력이 요구됨
 - 미국과 독일의 경우와 같은 적극적인 이민 정책으로 생산가능인구의 급감을 보완해야 할 것이며, 특히, 외국인 우수 인력의 유입 확대를 위해 체류 만족도 제고 및 체류 장기화를 유도하기 위해 체류 지원 강화, 근로 환경 제고, 지원 방식 개선 등이 필요함
- 한편, 노령층에 대한 중장기 사회 안전망 구축 로드맵이 시급하며, 사회 내 노인 문제의 심화 정도를 완화하고 경제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생산적 노인 복지 시스템 구축 노력이 요구됨

마지막으로, G7 경제 강국에 걸맞은 선진시민사회 구현을 위해 사회자본 확충에 주력해야 한다.

- 사회자본(social capital)이란 규범, 네트워크, 신뢰, 호혜성 등의 개념을 요소로 하여 사람들의 상호 작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무형의 자산을 의미함¹⁵⁾

15)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사회자본의 핵심은 다양한 주체 간 신뢰(민간 주체 간 사적 신뢰, 민간의 정부에 대한 공적인 신뢰)임
- 사회적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법치주의는 물론 사적 계약이 지켜져야 하며, 이는 강제적인 규범을 통해서가 아니라 선진시민사회에 부합되는 교육 시스템 확립과 상호 신뢰가 중요시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통해서만 가능함
- 또한, 사회가 발전할수록 다양한 갈등이 표출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하여 이해관계자들의 이견을 조율하여 사회통합을 유지할 수 있는 공적 및 민간 시스템의 역할이 요구됨 **HRI**

주 원 경제연구실장 (2072-6235, juwon@hri.co.kr)